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정책방향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대한 논고

- 1. 문제의 제기
- 2. 정책금융체계와 패러다임 변화
- 3.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정책방향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 4. 맺는말

^{*} 본 내용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신용보증기금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요 약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기존 어떤 정책금융기관이나 자금지원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이는 자칫 기존 정책금융기관 및 자금지원기관과의 업무중복을 가져와 정부재원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기존 정책금융기관 및 자금공급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설정하여 중소기업 금융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독일식 전대제도에 의한 금융지원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금융관행은 이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대제도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조기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출범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대출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전대 대출 사이에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구도는 신용 보증기금에 대한 시장실패의 보정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전대 대출과 신용보증 사이에 불가피한 업무경쟁에 대비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 취지에 맞 추어 민간금융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비우량기업에 대한 평가경험을 토대로 하여 미래사업성 평가능력의 제고와 함께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외부효과(externality),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공공재(public goods and service),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등으로 발생된다. 중소기업 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시장실패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효과에 의해 발생한다.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경우 사적정보 소유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이 발생함에 따라서 금융기관은 자금수요자에 대한 변별수단(screening device)으로써 이자율 대신 신용할당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또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경우 고용창출, 생산 및 산업 경쟁력 증가, 부가가치 창출과 같은 사회적 편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내재하는 높은 불확실성(예, 짧은 업력, 상품화의 위험) 등으로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특히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실패요인 중 정보의 비대칭성은 기장능력이나 유형자산이 부족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이나 기술개발기업 등에 있어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물론 금융기관이 관계금융을 토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미래사업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시장실패영역은 다소 축소될 수 있다.

IMF 이후 우리 금융환경의 변화, 즉 은행간 수익성 경쟁 격화, 외국인 지분확대에 의한 자율경영, 바젤 II 의 재적용 예상 등으로 민간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은 주로 성장단계 이상에 도달한 물적 담보가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의 창업초기기업, 기술개발기업들은 민간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여전히 곤란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기관에서 꺼리는 자금공급의 사각지대인 시장 실패를 보완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여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작년 금융위기와 같은 신용경색이나 경기침

¹⁾ 도덕적 해이는 사적정보를 이용해 차주는 보다 위험이 높은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사적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대출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역선택은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신용위험이 낮은 차주보다는 높은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의 상세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람. Stiglitz, J and Weiss, 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71(3), pp,393~410,

체 시 민간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회피성향에 의한 중소기업 대출 축소에 대응함으로써 경기 완충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자금공급측면에서 정부예산 상의 제약으로 자금공급 부족이 존재하는 반면 자금수요측면에서 특성(예, 자금접근성, 저금리 등)에 의해 자금수요 초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주체들은 지원중소기업 대상의 적격성, 사업위험과 기술성, 자금공급기간 등을 감안한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책금융자금의 부족분이 상업금융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자금지원은 각 국가의 경제발전, 금융체계(은행 또는 시장중심체계), 금융발전정도²⁰, 사회적 자본수준(the level of social capital), 정치 제도, 역사 및 문화 환경을 배경으로 자국에 맞는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 적합한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무조건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일률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자금 지원제도나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60년대 개발경제 이후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제도(예, 중소기업 의무 대출비율제도, 중소기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에 의한 자금공급, 신용보증기관에 의한 보증공급, 중진공에 의한 자금공급 등)를 운영하여 나름대로 시장실패의 보정과 국민경제신장에 기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책금융체계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2009년 10월말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산업은행의 민영화와 함께 종래 산업은행이 취급하던 정책금융을 승계한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금조달능력(예, 자본금 15조원, 정부보증채권발행 등)과 수행 업무의 다양성(예, 중소기업금융, 신성장동력산업지원 등)의 광범위한 업무수행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책금융체계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지난 10월 28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책 금융공사가 수행할 업무영역과 전대제도의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

²⁾ 한 국가의 금융발전 정도는 해당 국가의 시장가치총액(market capitalization)과 민간총여신(DCPS: Domestic Credit of Private Sector)을 합한 수치를 GDP로 나누어 측정한다. 절대수치 대신 비교대상 국가들 중 해당수치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각 국의 금융발전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보통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196.1%)은 프랑스(206.7%)와 비슷한 수준이며 독일(166.3%)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고, 미국(348.7%), 영국(335.4%)은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의 상세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바람. 송치승, 2008, 제2기 벤처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벤처산업발전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역할제고와 당면과제. 공청회.

라 기존 정책자금 지원기관(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의 업무중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정책금융 효율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고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함에 따른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패러다임분석을 통해서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기존 정책금융기관 간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사실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기존 정책자금 지원기관과의 원-원 관계, 정부차원에서 한국정책금 융공사의 전대제도의 성공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와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제언은 우리나라 정책금융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2. 정책금융체계와 패러다임 변화

1)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출범과 업무범위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초기자본금 3조원과 자산 28조원 규모로 2009년 10월 28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기존 산업은행이 수행하던 정책금융을 승계하여 전대방식(on-lending)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외에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6개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30 그런데 공사법 제21조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이들 6개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투자, 보증, 신용위험 유동화 등의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영역이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각 업무분야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할 역할 또한 매우 다양하고 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업무영역은 중소기업분야이다. 공사법 제1조와 제21조를 중소기업분야로 국한해서 살펴보면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자금공급, 투자, 보증 등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금융 부분은 기존 정책금융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의 중복이 예상된다. 비록 공사법 제27조에서 제21조 관련된 업무수행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기존 정책금융기관 및 자금지원기관과

³⁾ 이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칭함) 제1조를 참조 바람.

의 업무중복 논란은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소기업금융지원에서 기존 정책금융기관이나 자금지원기관과의 업무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독일식의 관계금융을 전제로 한 전대제도가 우리 금융환경과는 매우 상이하여 전대제도 성공에 대한 의구심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승계하여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기존 정책금융기관 또는 자금지원기관과 업무중복을 피하고 기존 정책기관 간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가. 한국정책금융공사 출범이전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의 육성시책 방향을 제시한 「중소기업기본법」 (1966.12제정) '금융 및 세제 조치'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미 1960년대 경제개발시대 이래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어 왔다. 〈표 1〉은 중소기업금융과 관련된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 내용을 몇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가용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에는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중소기업 의무대출과 총액한도대출 등이 속한다. 경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는 2009년 10월 현재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0%이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비율이 높아지고기업은행의 일반투자자 지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업은행들은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부담으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소기업대출 실적이 높은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대출 저리자금을 지원

⁴⁾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제도는 196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용해오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이 원화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주도록 규정하는 제도이며, 총액한도대출제도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 기업 대출실적을 토대로 총액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이 은행별로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운용해오고 있음.

⁵⁾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대출비율 미 준수 은행에 대해서는 미달 금액의 50%를 총액한도대출에서 1개월간 차감하며 준수은행에 대해서는 차감한 한도 여유 발생 분을 초과달 성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재배분하고 있음

하는 제도로서 경기침체나 금융위기 등과 같은 신용경색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해당은행이 지원기업을 선정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형식적으로는 거의 '전대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⁶⁾

표 1 정책금융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제도	주요내용	비고	
한국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각 금융기관이 원화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주도록 지원		광의의 정책자금
	총액 한도대출	시중유동성과 중소기업 및 지역금융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물적		
기술보증기금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채무 이행을 보증 *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89년 기술보증기		
지역신용 보증재단		금 설립 *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00년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기청 위탁 정책자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	협의의 정책자금	
중기청 이외 부처	정책자금	각 부처 소관 산업의 중소기업 지원		
지자체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과 병행하여 지자체별로 자체조성한 재원으로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		

자료 : 송치승 외 6인, 2009,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방향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p.19.

⁶⁾ 독일식의 전대제도는 정책금융기관인 KfW와 전대은행 사이에 위험조정가격체계에 의한 합리적 위험분담이 존재하고, 금융기관이 관계금융을 통해 자금공급을 한다는 면 등에서 우리 전대제도와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둘째,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 및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완을 통해서 자금접 근성을 제고시키려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속한다. 보증은 정부재원에 의한 정책자금과 달리 기본재산의 출연으로 운용배수만큼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대출의 확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은금융기관의 자산을 이용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약화 시엔 강력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곤란한 창업초기, 신기술개발기업, 사업전환기업 등에 대해 정부의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중기청 위탁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청 이외의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칭함)가 여기에 속한다. 대표적인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장실패영역인 창업기업, 개발기술사업화기업, 사업전환기업 등을 중심으로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왔다.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은행권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위기이전에는 매년 통상 3조원 수준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4.2조원(1월~8월 누계)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각 지자체별로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조성하여 은행을 통해 대출하는 방식과 은행과 협력하여 은행 자체자금으로 대출하되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 전체의 시도자금이 1.3조원이고 은행협약자금이 5.5조원으로 총 6.8조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그런데 지자체 지원방식은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등 상환 능력 위주로 평가하므로 사업성 및 기술성이우수하나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이 소외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⁷⁾ 한 예로, 2008년의 금융기관 원화 유동성 위기에서 보듯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보증을 해 주어도 금융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음.

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운용하고, 정부가 조달금리와 융자금리간 금리차이만을 보조하고 있는 체계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적으로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하 '직접대출'이라 칭함)과 은행권을 통해 간접 대출하는 방식(이하 '대리대출'이라 칭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작년 말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하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강력한 정책적 효력을 발휘하였음.

⁹⁾ 이의 상세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바람. 송치승 외6인, 2009,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방향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pp.22-23.

논고 **KODIT Research**

〈그림 1〉은 한국정책금융공사 출범이전 이상에서 설명한 우리나라 공적부문의 중소기업금 융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과 같이 정부. 지자체.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정자금 분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위탁은 형식적으로는 독일 식 전대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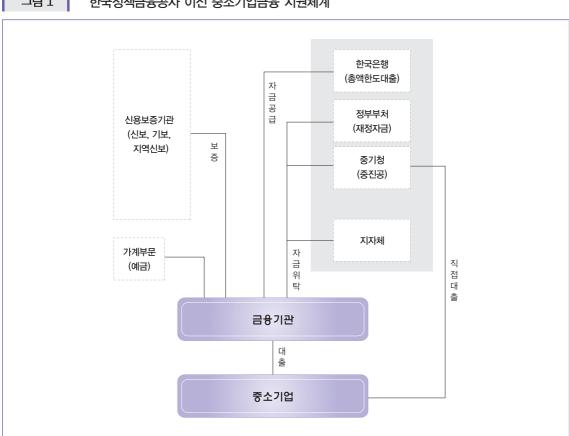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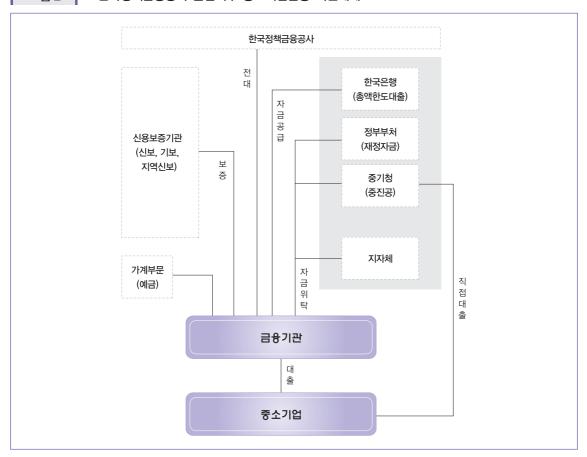
그림 1 한국정책금융공사 이전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나 한국정책금융공사 출범이후 중소기업 금융자원 체계

〈그림 2〉는 독일식 전대제도를 표방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출범이후 우리나라 공적부문의 중소기업금융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자체 자본금과 채권발행을 통해 마 련된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대출을 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 중심의 중소기업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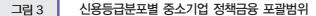
책금융지원체계는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전대대출은 기존 은행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리대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보증대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등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도록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왜냐하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언급된 전대업무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는 기존 정책금융 또는 자금지원기관 간의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전대업무가 기존 정책금융기관 또는 정책자금 지원기관과의 업무와 경쟁관계를 갖도록 한다면 같은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원배분 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기존 정책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지원기관과 협조관계를 구축한다면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간에 정책금융지원업무의 시너지효과 발생과 함께 재정의 효율화가 기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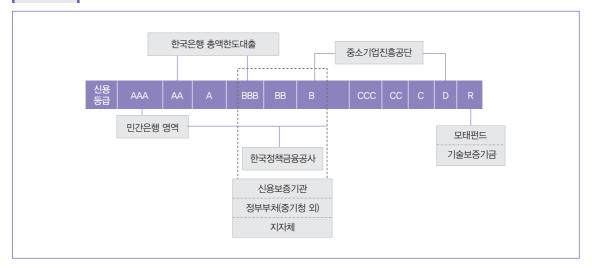
그림 2 한국정책금융공사 출범이후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다.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기존 정책금융기관 및 자금지원기관과의 업무관계

〈그림 3〉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할 전대업무 대상과 기존 정책금융 또는 자금지원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별 분포를 가정한 것이다. 〈그림 3〉의 신용등급은 각 정책금융기관이나 자금지원기관 간 측정기준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일률적인 통일된 신용등급 구분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각 기관의 업무영역별 비교대상 차원에서 신용등급보다는 신용도의 차이관점에서 사용하고자 한다.¹⁰⁾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한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상을 보면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취급하려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업무가기존 정책자금 지원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등과중복되는 영역임이 분명해진다. 이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영역이 정책금융 대상의 확대가 아니라 BBB∼B 등급 사이에 있는 상대적으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정책금융기관의업무영역인 데에 기인한다. 이것이 바로 공사법 제27조에 규정된 기존 금융기관과의 경쟁업무 금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기존 정책금융 및 자금지원기관과의 업무중복에대한 우려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¹⁰⁾ 이의 대안으로 업력, 매출액, 자본금, 총자산 등과 같은 다른 요소로 정책금융 지원기업의 선정이 구분될 수 도 있음.

사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기존 정책자금 지원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 정책금융공사 출범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별 이해관계만¹¹¹을 충족시키는 정부재원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자금지원기관 간의 협조관계 구축은 중소기업금융에서의 시장실패를 줄이고 지원중소기업의 성공에 의한 기업가치 제고 나아가 한국경제 신장의 확대에 기여하도록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관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기존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시장실패영역에 대한 서로의 역할 분담으로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 기술개발기업, 소기업과 같은 시장실패영역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들 기업에 대한 맞춤형 연계지원경험¹²³을 살리도록 특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직접 대출을 피하고 시장실패영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대상이 아닌 중견기업과 또한 기존 정책자금 지원기관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규모 이상 기업지원 등에 전대방식에 의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¹³⁾

둘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의 역할분 담과 협력이 요구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초기 및 성장단계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에 집중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특화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직접보증을 피하고 신보나 기보의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전대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이들 보증기관의 보증재원을 전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¹¹⁾ 이는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기청 소속 기관임을 의미함.

¹²⁾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맞춤형 연계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기술 전문가가 지원대상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종합 진단을 실시한 후 기업과 공동으로 경쟁력 향상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정책자금 지원성과 극대화, 기금부실예방,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맞춤형 연계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에 따른 해당기업의 신용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도 역할을 수행한다.

¹³⁾ 독일의 전대방식에서 KfW는 직접대출을 하지 않듯이, 한국정책금융공사 또한 직접대출을 피하고 전대방식에 의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직접대출을 한다면 이는 독일식 전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시장을 구축하는 효과(crowding-out effect)와 같은 시장왜곡과 함께 신용위험집중과 같은 시장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데에 기인함.

비록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하더라도 중소기업금융에서의 시장실패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시장실패영역을 좀 더 줄이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제기한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기존 정책금융기관 및 지원기관과의 협조가 적극 요구된다.

3) 중소기업 금융의 패러다임 변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은 창업초기기업,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여 이들 기업의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출범이 기존 중소기업 업무의 중복이 아니라 협조관계를 통해 정책금융의 대상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기존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정책금융의 대상 확대에 기여하도록 실행 메커니즘을 갖는다면 자금수요자인 수혜기업,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존 정책자금 지원기관, 그리고 상업은행 사이에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 수혜기업의 확대가 가능해진다. 종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시장실패영역에 있는 창업초기 중소기업, 사업전환 중소기업, 일부 중견기업만이 정책금융의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한 이후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시장실패영역에 있는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기존 산업은행이 수행하던 정책금융수단으로 장기성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자금이 수반되는 SOC와 같은 사업을 행하는 대기업에도 전대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출범은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경제주체 내 사업기회가 유실되지 않도록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지원 대상의 확대는 한국경제의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정책금융 수혜 중소기업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예, 신보, 기보 등)과 자금지원기관(예,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기존 정책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일정 궤도로 성장한 중소기업이 이제는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정책자금지원을 받아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창업초기기업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성장한 다음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후속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이 이전보다는 금융접근성의 확대를 통해 기업생존 및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한국정책금 융공사가 전대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을 기피하는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의 보완 범위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전대 방식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금융기관이 신용 평가에서 대출에 이르는 과정을 결정함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므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하더라도 시장실패영역은 여전히 존재하게된다.

넷째, 전대은행 중심으로 금융관행의 일부 개선이 기대된다. 은행은 원리금 회수를 기본으로 한 보수적인 여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Peterson & Rajan(1994, 1995), Gompers(1995)가 제시했듯이 은행은 담보자산이 부족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skill)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전대은행체계를 근간으로 출범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전대제도의 성공을 위해 전대은행에 대한 관계금융의 일환인 연성정보(예, 지원요청 중소기업의 CEO, 해당기업 거래처 및 고객 등의 질적 정보)구축과 이들 전대은행의 미래사업성 평가능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전대은행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인프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피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대은행제도가 서서히 정착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고객밀착형 관계금융과미래사업성 평가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민간은행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위주의 여신관행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3.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정책방향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1)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정책방향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전대방식을 이용하여 종전 산업은행이 행하던 정책금융의 역할을 수행함과 더불어 기존 정책자금 지원기관과 업무협조체계를 원활히 구축하여 정책금융의 효율화를 기해야한다. 또한 전대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일 전대제도의 인프라인 관계금융과 위험조정가격체계구축 등이 요구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산업은행이 수행하던 정책금융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SOC, 지역개발금융 등과 같이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를 기피하거나 대규모 자금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 전대대출 또는 Co-financing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외자조달창구기능의 수행과 함께 경제위기나 금융혼란 시에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회사채를 인수하거나 긴급자금지원 등과 같은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

둘째, 정부재원의 효율성과 정책금융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기존 정책금융기관이나 자금지원기관과의 상호보완적인 구체적 업무협조체계를 제시해야한다. 업무협조구축체계 한 예로는 공사법 제27조의 경쟁금지 규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가민간금융기관, 기존 정책금융기관이나 자금지원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¹⁴⁾ 또 다른 업무협조 구축체계로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민간금융기관에 전대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산채를 필요시 인수하는 것,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재원의전대 또는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는 것. 그리고 모태펀드에 대해 출자를 하는 것 등이 있다.

셋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전대대출의 성공을 위한 독일식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야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이나 중소기업진홍공단의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은형식적으로 전대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전대대출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전대제도의 근간이 되는 연성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관계금융, 전대은행의 미래사업성 분석능력, 그리고 자금공급기관과 전대금융기관 간의 위험조정가격체계의 구축 등과 같은 인프라가정비되지 못한 데에 있다.¹⁵⁾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이러한 전대제도의 인프라가 미흡함을 인지하고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에 의해 신용위험 – 가격 체계를 단시간에 모의실험을 통해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신용위험 – 가격 구축체계는 본래 신용사건 및 위험의발생 DB 자료에서 장기간의 시계열을 통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단기간자료에 의한 모의실험을 통해서 구축되는 위험 – 가격체계는 시급성에 의해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향후 장기적 신용사건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해결해 나가야한다. ¹⁶⁾

¹⁴⁾ 이의 구체적인 예로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직접대출을 금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의 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신보 및 기보와 관련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함.

¹⁵⁾ 이외에도 독일식 전대제도에서는 전대은행이 민간은행에서 취급하는 비중은 20% 수준이고 대부분은 정부관련 공립은 행인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정부공립은행'을 전대제도의 성공요인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음.

¹⁶⁾ 왜냐하면 단기간 자료에 의한 신용위험-가격체계의 구축은 신뢰성 확보가 어렵고 예측오차의 발생 정도가 높을 수 있 기 때문임.

한편 전대제도 성공요소는 일종의 금융 인프라로서 장기간 시간을 두면서 구축해 나가야할 사안이므로 전대제도가 조기 성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전대업무를 수행하는 전략적인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대제도의 조기정착과 성공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설립취지에 부합된 효율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통해서 기존 정책자금 지원기관 간의 업무중복을 지양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대제도의 성공을 위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 국책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중견 및 대기업에도 전대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우리은행들의 취약한 관계금융 능력 및 미래사업성 평가능력을 고려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책금융공사는 국가적 지원이 요구되는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분야의 중견 또는 중견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투입재원 회수의 장기성과 사업위험성을 감안하는 경우 상업은행 속성상 이들 기업에의 자금지원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대대출에 의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데 있다.

둘째, 기술혁신 중견기업도 전대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산업구조가 기술혁신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은 초기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초기중소기업은 자금의 충분성은 부족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기보,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체계이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상 불리한 입장에 있음에 따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기술혁신 중견기업에 대한 전대실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2)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그림 3〉에서 보듯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분포는 거의 중복되고 있다. 또한 공사법 제21조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이들 6개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투자, 보증, 신용위험 유동화 등의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법 제27조의 기존 금융기관 간 업무중복 회피라는 규정에서 보면 한국정책 금융공사의 보증은 직접보증이 아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본 논고에서는 한국 정책금융공사와 기존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기관 간에 협조관계 구축이 우리나라 정책금융 의 효율화를 위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이의 논란은 차지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용보 증기금이 수행하는 직접보증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신용보증 기금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간의 업무지원 대상영역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왜냐

하면 비록 두 정책기관 간 실제 등급측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신용등급 순위 상으로 보면 한국 정책금융공사가 전대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용등급과 신용보증기금이 통상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대체로 겹치는 BBB등급에서 B등급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¹⁷⁾

본 절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대상 간 경쟁에서 지원대상기업의 행동을 먼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한다. 지원대상기업은 경제적 관점에서 행동한다. 다시 말해 지원대상기업은 전대제도와 신용보증제도의 대출제도 중에서 가장수수료가 적게 드는 정책수단을 찾을 것으로 본다. 전대제도의 수수료는 한국정책금융공사와전대은행 간의 위험분담비율, 전대자금의 이자 등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신용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보증료에다가 은행대출이자율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므로 두 정책수단 간에 수수료의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두 정책자금 기제(vehicle)에서 자금공급 심사과정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전대은 행은 보통 이익추구와 함께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신심사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전대은 행은 우량한 중소기업에게 전대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신용보증기금은 은행보다는 덜 보수적이고 많은 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 경험을 활용하여 현재 비우량기업이라도 미래지 향적 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반드시 은행대출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두 정책자금 기제 간에 차입비용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지원대상기업은 당연히 자금조달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량기업은 두 정책자금 기제 어느 곳에서든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비우량고객은 보증대출 외에 보수적인 은행으로부터 전대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정책기제 간 조달금리 차이의 수혜는 우량 중소기업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정책자금 기제 간에 차입비용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지원

¹⁷⁾ 본고에서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전대제도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가 경쟁관계에 놓여 있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정책금융공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보완하는 순기능도 생각해볼 수 있다. 순기능구도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 기업에 대한 보증을 할 때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대한 재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신용보완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 와 신용보증협회 간의 재보증 경우이다. 그러나 일본의 신용보증협회와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금은 역할과 기능이 다른 므로 일본의 사례가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상기업은 당연히 자금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여기서 보증대출은 보증서심사와 민간은행대출심사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전대대출보다는 자금조달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므로 우량 중소기업은 보증대출보다는 전대대출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전대대출과 보증대출 간 차입비용 차이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간에 우량 중소기업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출범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 보면 이전의 우량 중소기업 고객(신용등급 기준)을 전대대출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일정 우량 중소기업대신 비우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야함을 의미한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보증대상만이 변한다는 전제에서 결국 신용보증기금은 종래보다 비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됨에 따라 대위변제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정책금융공사 출범이전 수준의 대위변제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고객대상이 우량에서 비우량으로 바뀔 것이란 사실을 감안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취급하는 대상기업이 전대기업이 취급하는 우량기업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는 민간은행대출이나 전대대출과는 달리 중소기업 금융체계에서 당연히 발생됨을 인식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기금은 민간은행의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미래사업성과 연관된 보증을 통해서이들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용보증기관의 대상기업수준과 보증역할을 감안할 때 대위변제율의 발생이 불가피한 결과임을 인식해야한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민간은행의 매출액 중심의 평가 대신에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사업경쟁력 평가를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신용보증기금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의 대위변제율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보증심사에 대한 사전절차강화와 사후관리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 예로는 연성정보와 같은 질적 정보의 강화를 통해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시키고, 보증이후 해당기업에 사후방문관리 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바젤 Ⅱ 시행 하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출제도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젤 Ⅱ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대출의 위험가중치가 '0'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바젤 Ⅱ의 시행이 연기되고 있지만 경제안

정이 이루어지는 내년부터는 동 제도의 시행이 가능해지리라 본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대출은 민간대출보다 대출효용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신용보증기금은 바젤 II에서 민간대출이 꺼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보증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넷째, 국민경제에서 고용창출효과, 정부세수확대효과, 그리고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한 보증재원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주어진 재정제약 하에서 효율적인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은 기존 정책금융기관이나 자금지원기관과의 차별성 확보와 더불어 신용보증의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18)

다섯째,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초기 및 성장단계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집 중하면서도 시장실패영역에 있는 성장유망한 중견기업의 심사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4. 맺는말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면서 기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의 인수와 더불어 독일식의 전대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육성 등의 분야에 자금공급을 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출범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본다. 왜냐하면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기존 어떤 정책금융기관이나 자금지원기관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포괄할 정도로다양한 업무영역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출범으로 우리 중소기업은 종래보다는 자금조달 수혜대상자가 늘어나게 되고 전대대출의 추가로 인해 자금조달 수단대상도 확대할 수 있는 등의 경제적 편익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편익기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할 업무영역이 전대업무를 제외하고 어떤 업무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표방한 전대업무만 보더라도 전대업무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기존 정책기관이 지원하는 지원대상과 상당부분 중복되면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향후 역할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비록

¹⁸⁾ 이러한 유형의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람. 노용환, 2009, 경기침체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성과 및 역할, 코딧리서치 가을.

공사법에서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금하고 있지만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전대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존 정책금융기관이나 자금지원기관과의 업무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체계의효율성이 좌우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기존 정책금융기관 및 자금공급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설정해야함을 제시하였다. 정책기관 간의 상호협조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중소기업시장실패를 축소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성공은 우리 중소기업 금융체계의 발전과 직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기존 정책금융기관및 자금지원기관과의 협력과 더불어 본고에서 제시한 대로 전대제도의 조기정착과 성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출범으로 기존 정책금융기관 및 자금지원기관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다른 정책기관에 비해 지원대상 기업에서 전대대출과 보증대출 사이에 선의의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는 전향적 차원에서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시장실패에 대한 보정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전대대출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까지 미래사업성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역량 확충과 함께 비우량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노용환, 2009, 경기침체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성과 및 역할, 코딧리서치 가을.

- 송치승, 2008, 제2기 벤처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벤처산업발전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역할제고와 당면과제, 공청회,
- 송치승 외 6인, 2009,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방향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Gompers, Paul A., 1995, "Optimal investment, monitoring, and the staging of venture capital," Journal of Finance, Vol.50, No.5, pp.1461~1489.
- Peterson, M. and R. Rajan, 1994, "The benefits of lending relationships: evidence from small business data," Journal of Finance, Vol.49, No.1, pp.3~35.
- Peterson, M. and R. Rajan, 1995, "The effect of credit market competition on lending relationship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0, No.2, pp.407~444.
- Stiglitz, J. and A. Weiss, 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1, No.3, pp.393~410.